

도, 봄철 대형산불 대응 태세 강화

내달 1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감시·단속 강화
산불 감시원 배치·기동단속반 운영... 불법 소각 등 단속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제 적용,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단계(3월22일)가 발령되고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산불 예방, 초동 진화 체계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17.5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6억6,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44건의 화재가 발생해 301.72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에

따라 모든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 소각 차단을 위해 농업부와 협업체 영농부산물물의 수거와 파쇄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은 올해 2,970개 마을이 참여해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제'를 적용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진화 헬기와 지상 인력을 총동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남원, 진안, 고창 등 3개 권역에 진화 헬기를 배치하고,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초동진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는 14개 시군에서 92명의 신속대응조가 오후 10시까지 상시 대기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반의 산불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산불방지 ICT플랫폼을 구축해, 78대의 산불감시 CCTV를 연계하고, 딥러닝 기술로 산불 연기를 실시간 감지·판단에 SNS로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전탑을 활용한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 3대도 신규 설치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로, 도는 시군에 △화목보일러 등 불씨관리 철저 △영농부산물 신속 파쇄 및 소각 단속 강화 △건조·강풍 특보 시 대형산불 대비 전 행정력 총동원 △산불예

방 현수막 및 가가호호 방문 홍보 등 예방·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시달렸다.

특히 청명·한식, 식목일, 어린이날 등 산불 고위험 시기를 대비해 공원묘지, 가축목지,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의 대형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불씨도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초동진화와 ICT 기반 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의가 이긴다" 진보당 소속 김판수(87)씨가 전북특별자치도청앞에서 '정의는 이긴다'라는 손수 쓴 글씨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이성윤 의원, "전북이 성장할 최소한의 기회 주는 것"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를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북·전주권이 대광법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총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나, 전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대광법을 '전북 차별법'이라 부르며 대광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광법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에게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었다. 이번 통과로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성윤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대광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법사위 상정전에는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하였고, 개별 의원들에게 진서를 보내는 등 법안 처리에 온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이제 대광법은 본회의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전국 광역단체 중 사실상 전북만 차별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소멸 위기까지 닥친 전북에게 이번 개정은 절박한 일이며, 나아가 수십 년간 차별받고 홀대받은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본회의 통과에도 전북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에 힘 보태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가 26일 성명을 통해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자를 위로하며, 재난 상황의 조속한 종결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남이 대변인은 40명 전북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풍을 타고 확산된 산불이 국민의 생명과 터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 당국과 관계 기관에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다"며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전북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따뜻한 도움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전북도가 힘을 보탬 차례"라며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림 재난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30여명의 회원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3.27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즉각 파면... 3·27 총파업 지지"

도내 시민단체, 현재 결정 지연에 반발... 총파업 동참 촉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3월 27일 총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소속 회원 30여 명은 "내란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우 세력의 선동과 폭력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법적 관

용을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강경 진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청소년·청년 학생들의 삼보일배 행진, 대학생들의 동맹휴학, 사회 각계의 단식 투쟁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이 3월 27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단위 연대체인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시민 총파업을 호소한 상태다.

이들은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정

권을 끝장냈고, 1980년 5월 민중항쟁이 군부독재 종식을 이끌었으며, 1987년 민주화 항쟁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관련 세력이 불러온 겨울을 끝내고 함께 봄을 맞이하자"며 "3월 27일, 전북 도민들도 일손을 잠시 놓고 시민 총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전북 지역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발전협의회장들과 간담회

남원시의회는 김영태 의장이 26일,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원시 발전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태 의장, 지역 발전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어려워진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농업을 비롯해 체제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태 의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9개 기독교 단체, 현재에 "尹 탄핵 신속 인용" 촉구

전북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9개 기독교 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내란법 탄핵 판결 지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신속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 회원 10여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9개 단체는 "현재는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최우선적으로 판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판결이 지연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



전북교회협의회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과 이재명 대표 판결을 조정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언급하며, 단체들은 미국이 과거의 역사적 죄악을 반성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단체들은 내란법 탄핵 최우선 심판 약속 이행, 헌법 파괴자 두둔하는 국힘당 해산, 내정 간섭하는 미국의 대사대리 추방 등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는 전북교회협의회, 전북인권선교회의

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감찰대책위원회, 전북기독교세만금안공추추진위원회, 세계종교평화기독교협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YMCA 만민회, 전북평화통일기도회, 전북기독교역사바로세우기실천협의회 9개 단체가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재가 정치적 외압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영국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원의 특혜·탈법·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특정인 C씨로부터 도자기 찻잔을 총 2,3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출영수 없이 기념품이 지급됐고, 지금 대상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특히, 11월 구입한 도자기는 '도민의 날 기념 공민'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도민의 날(10월 25일)이 지난 후 구입해 다른 행사에서 사용했다.

12월에는 C씨의 아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납품은 C씨가 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게다가 계약기간(12월 3일~30일)이 끝난 후에도 두 달이 지난 2월 말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악원은 허위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실제 검수 없이 공방이 보낸 사진을 첨부해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

작년 7월에는 C씨로부터 불법 기부를 받아 도자기 전시행사를 열었고, 원장과 단원들이 도자기 3점을 900만원에 판매한 후 이를 국악원 방송 광고비로 사용했다. 이는 기부금품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대 도립국악원장은 "어제 도정 질의에서 지사님께서 절차상 미흡을 시인하셨고, 도립국악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원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사안으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악원장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악원장은 과거 국립극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특정 예술감독에게 출퇴근 지문인식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해당 감독의 출퇴근 기록이 일정하지 않고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2월 진행된 무용단원 채용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실기전형위원 5명 중 4명이 합격자 A씨 아버지와의 연결된 인물들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국악원장의 석·박사 지도제자였다. 심사위원 선별 과정도 의문스러운데,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 10명 중 5명이 유연하(?) 최종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악원 관계자는 채용선발과 관련하여 "국악원이 보유한 인력풀이 200여 명으로 이중 분야별 심사위원을 무작위 선정하고 실기시험 2-3일 전에 전화로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역, 출신학교, 사사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응시자와 무관한 심사위원이 선정됐음을 강조하고 응시자와 심사위원 간 가족 친분까지 조사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국악원장은 실기 및 면접시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